

'20.9.24일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 두 말 씀

2020. 9. 2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 회의를 통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핀테크 부문과 여전업계 의견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류준우 보맵 대표님과 이인석 전무이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금융 진출이
금융산업,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반인
금융부문 인증 및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논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정부의 정책 방향

1.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와 대응

전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판매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해외) Amazon은 온라인 고객 대상 대출(Amazon lending), 보험(Amazon Protect), 자산관리(Cora)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 (국내) 네이버 통장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CMA 상품 판매)
자동차보험 가격비교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검토중) 등)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플랫폼의 금융진출과 관련하여 글로벌 시장질서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이다보니, 그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한번 형성된 시장질서는 다시 바뀌기 어려운 만큼,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 예 : ①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 광고, 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②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③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 EU 등 국제논의 동향

- EU 「온라인플랫폼법」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약관 고지, 이용자 권리 명시 등을 통한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

- ‘공정성’, ‘책임성’은 AI, 알고리즘 등 금융분야 신기술에 대한 규율로 확보

* EU,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 싱가포르, 「금융분야에서의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AIDA) 사용상 공정성, 윤리, 책임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원칙」

- ➡ 투명성 중심 규제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되, 공정성 및 책임성 관련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효과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❶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❷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 예 :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건전경쟁 기여도 등

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등

조속한 시일 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정하여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은행, 보험, 여전업 등 각 업권별로 플랫폼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되는대로 조속히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방향

금융분야의 인증, 신원확인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작업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인증,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IT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획일적 표준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지만,
아직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첫째,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조회, 출금 동의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대출, 고액 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 and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금융거래를 위한
절차적 보완사항 등도 꼼꼼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 및 금융사기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신원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디지털 신기술도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절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마무리 말씀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

“between Scylla and Charibdis”

오디세우스가 떠나면 귀향 여행 중
두 바다괴물이 버티고 있어
조금이라도 빠듯하면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좁다란 협곡을 마주했듯이,

혁신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빠르고 속도감 있는 기술 변화만을 추구할 때,
시장의 혼란으로 혁신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안정된 시장질서만 강조할 경우
빠른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두 어려운 선택지 사이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과감히 전진해 나가는
“오디세우스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치열한 토론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참석자 여러분들의
많은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